

잇단 어린이 비극 막을 수 있었는데...

이모에 살해된 아이 어린이집 원장·친모, 아이 학대 정황 알아 통학차량 후진사고 후방카메라·경고음 모두 의무설치 했다면 찢통버스 사망사고 1분만 차량 둘러보고 출석체크만 했어도

이제 막 곁을 떠날 때 어린이들이 잇따라 어른들의 잘못으로 숨지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친이모에게 학대받다 살해당한 세살배기,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여수 어린이집 원생, 찢통 통학 버스에 갇혔다가 사경을 헤매는 광주 유치원생 모두 어른들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극단적인 사고 발생 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어린이집 원장·친모, 아이학대 정황 알고 있었다”=친이모에 의한 조카 학대·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평소 이모에 의해 학대당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체포된 친이모 최모(25)씨 수사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6월 말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담 받으러 어린이집에 와달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어린이 학대 사망이 잇따르면서 강화된 법에 따라 학대 정황을 확인한 교사(어린이집 포함), 의사, 구급대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친이모에게 학대 의심 사실을 알렸고 친모가 직접 총북지역 한 병원에서 아이의 부러진 팔을 치료했다는 점에서 친모 역시 숨진 아들이 평소 학대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지난 7월 말 친모와 함께 팔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 의사 역시 학대 의심 사실을 알고도 지나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친모는 어떤 식으로든 숨진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팔을 치료한 의사 역시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학대에 가담했거나 방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학차량 후진 사고→후방카메라 의무화됐더라면=지난 10일 오전 여수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한 두살배기 어린이의 죽은 역시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만 설치됐

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어린이집 원장 송모(여·56)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됐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해 계속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막 어린이집에 도착해 하차했던 박군이 매뉴얼대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통학차량 뒤에 남겨졌고, 주변의 소음이 컸더라도 후방카메라만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얘기다.

사고가 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여수시청 관계자는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발생장치 둘 다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설치하도록 관련법에 돼 있다. 사고가 난 차량은 후방카

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자동차안전기준(국도교통부령)’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2014년 내놨지만 큰 비용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두 장치를 모두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가 다소 느슨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 버스에서 8시간이나 갇혀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어린이 역시 동승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이 사전에 좌석을 살펴거나 출석체크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학차량 안전설비 강화와 함께 교사, 운전기사 등 관련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안전의식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세살배기 친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모(여·25)씨가 11일 나주경찰서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지금 많이 떨리고 무섭다. (폭행, 학대 사실) 모두 인정한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목 조르고 욕조에 밀어넣었다” 자백... 조카 살해 이모 영장

나주경찰은 11일 대소변을 못 가리고 보낸다는 이유로 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여·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 욕실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 최모(3)군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물이 가득 찬 어린이용 욕조에 수차례 들이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군은 이모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4시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몸 곳곳에 난 멍자국과 한쪽 팔을 깰스한 최군을 수상한 여건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최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보채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 그 뒤 숨을 쉬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자백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압송된 이후에는 “조카가 설사에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말한 뒤 “욕실로 데리고가 씻길 때 구토까지 해 화가 치솟아 물이 가득 찬 어린이용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모인 최씨와 함께 살다가 지난 6월 친모가 총북의 한 공장으로 일하러 가면서 이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조카가 보낸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온몸을 맞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날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모에 의해 팔을 발혀 골절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최군은 설골(허부리 뼈)·공막·혜장 등에서 출혈이 관찰됐으며, 이는 목 졸림과 등 뒤쪽에서 가해진 충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최근까지 정신과 진료(조울증)를 받으며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에는 집에서 자살시도를 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on@kwangju.co.kr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시교육청, 유치원 교원 교육

광주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은 12일, 사립유치원 교원은 17, 23일, 공립유치원 교원은 24일 등 모두 4번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법과 통학버스 동승자 매뉴얼, 교통사고 후 응급처치 요령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에 결석한 원아에 대해서는 가족과 연락해 확인하는 등 원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찰 특혜·직원 수당 편법 지급 전남도 출연기관들 감사서 적발

규정을 어기고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각종 직원 수당 등을 편법으로 지급한 전남도 출연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 출연기관 감사 결과 생물산업진흥원은 생산장비를 구축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이종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 단독으로 응찰하게 해 10억8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또 외국산 분석기를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만 가진 발생기 전력(9kW)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어 이 업체만 응찰해 5억4000만원의 계약을 했다.

진흥원은 제조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공고 법정기간(20일) 보다 14일 부족하게 공고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자가 하도급을 줬는데도 계약해

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국책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공개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도 비공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업체에 특혜를 줬다. 전남도는 이들 기관 직원 4명에게 경징계하도록 했다. 이들 출연기관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인 주 12시간을 무시하고 과다 지급 ▲버스와 자가용 출장 갈 때 KTX 비용 지급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복리후생비로 부당 지급 ▲서면으로 개최한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부당 지급 등을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직원 성과급 지급 때 등급별 간격을 임의로 조정해 ‘나눠먹기식’으로 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종황기자 golee@kwangju.co.kr

여친에 음주운전 떠넘긴 30대 징역형

허위진술 여친은 벌금형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여·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새벽 2시에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이로 인해 실제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구청장 재선거 선거법 위반

광주지검,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바이럴(Viral) 마케팅’ 선거운동을 부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인터넷 홍보업체 대표 K(35)씨와 파워블로거 M(29)씨, 선거캠프 관계자

K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K씨는 지난 4월13일 예정된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300만원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K씨는 파워블로거 M씨에게 ‘바이럴 마케팅’ 착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경과 총경 불륜관계” 악성 소문 유포 경찰 2명 벌금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미모의 여성 경찰관과 총경급 고위 간부가 불륜 관계다”는 악성 소문을 대신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경찰관 2명이 벌금.

○11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는 지난 7월 7일 우연히 알게 된 악성 루머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에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C지방경

찰청 소속 경찰관 D씨는 관련 내용을 모바일로 그룹 채팅하던 중 루머 속 인물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글을 단 혐의.

○“미모의 여경과 고위 경찰의 애정 행각이 청사 내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됐다”는 식의 소문을 접한 피해 여경은 경찰에 최초 유포자를 밝혀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냈고, 최초 유포자들을 검거한 경찰은 해당 소문을 허위로 판단하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를 논의 중.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능)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